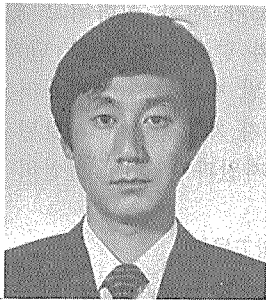


통신시장의 개방압력과 우리업계의 대응



성극제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들어 통신 또는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언론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를 점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쌍무통신회담 및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통신시장 개방압력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시각에서의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록 간단하기는 하지만 외국으로부터의 통신시장 개방압력 및 현재의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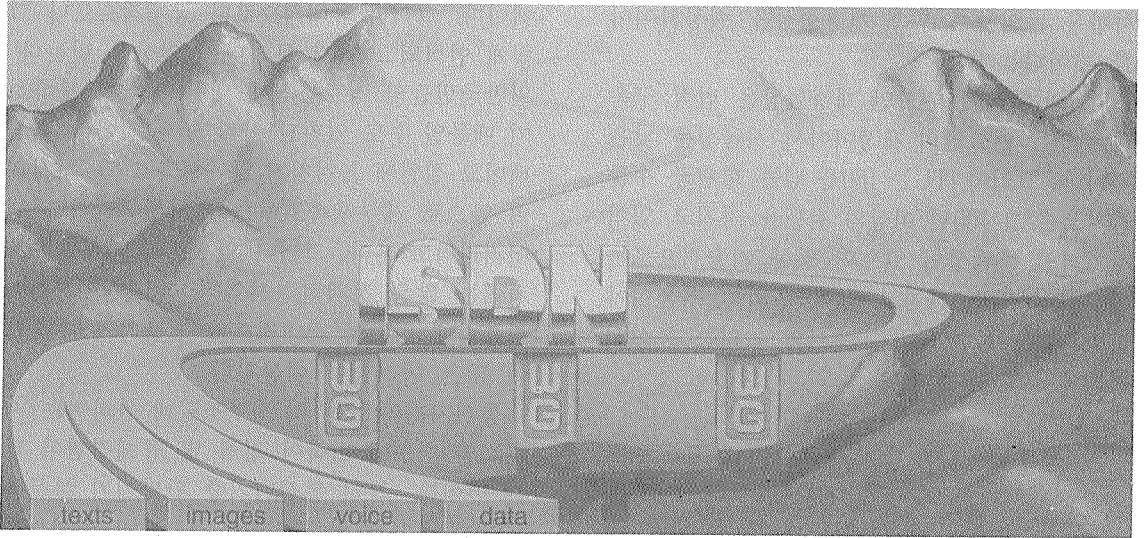
내정책 그리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방압력의 현주소

외부로부터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미국과의 쌍무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ITU의 CCITT D.1 권고안 개방작업이 있으며 이 중에서 제일 강도가 높은 것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이다. 미국과의 쌍무협상은 '87년에 신타파약의 성격을 띤 MAFF(시장접근 신타파약) 협상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88년 6월까지 계속된 동협상을 통하여 미국은 은근히 시장개방압력을 가하였었다. 동 기간동안 국내적으로는 세차레에 걸친 회선자유화 조치가 취하여졌으나 본격적인 개방조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88년 8월 그 유명한 '88 종합무역법안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 비록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무역법안내에는 유일하게 개별분야로 통신이 선정되어 통신무역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 법에 따라 미국은 '89년 2월에 한국과 EC를 통신분야의 우선협상국가(PFC)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개방협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협상때와는 달리 미국측의 협상대표가 통신전문가가 아니어서 통신에서의 특수성을 미처 감안하지 못한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89년부터의 개방압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거세었으며 미국은 정보통신시장의 즉각적인 개방을 원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통신시장의 단시일내 개방은 무리한 요구이었다. 통신시장의 개방은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며 실제 선진국에서도 통신시장의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미국과의 쌍무회담은 현재로서는 '92년 2월까지 협상기한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나 내년 2월이 종합무역법에 따른 최종협상시한이어서



통신기기 중에서 단말기기는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부분이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과의 쌍무회담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단순자료처리시장은 대외적으로도 개방되었으며 본격적인 VAN 시장은 대내적으로는 '90년 7월부터 개방하고 대외적으로 아직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94년 1월부터 개방하기로 하였다.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요구는 없었으나 정보통신이 기본통신서비스에 의존하는 만큼 기본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자세하게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으나 쌍무회담에서는 통신기기의 표준 및 정부조달에 관하여도 토의되었다. 현재로서는 크게 보아 이 두부분에 관하여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기기의 표준에 대하여는 정부의 강제표준은 통신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국한하고 그 이상의 표준은 모두 민간의 자발적 표준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민간표준 제정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의 표준제정활동에는 국내기업에게는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공개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통신의 경우에 호환성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가표준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강제표준으로 인한 기술발전 저해 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많은 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면 오히려 강제표준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조달절차를 '93년부터 GATT 정부조달절차에 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작년 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GATT 조달협정 노력이 '93년 이전에 성공하면 그 절차에 따르기로 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통신서비스 개방논의는 다자간의 협상인 만큼 쌍무협상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지만 통신서비스에 관한 한 기본통신의 개방까지 포함하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였다. 서비스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므로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부속서를 제정하기로 하였는데 통신분야는 그 중에서도 부속서 제정작업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협상참가국들이 개방에 적극적이라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이 일반적 원칙만을 다루고 세부사항은 각국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직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또 이번 협상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는 후속 개방협상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ITU의 CCITT 권고안 개정협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의 개정이어서 시급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ITU는 160을 넘는 회원국 수를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또한 기술적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CCITT에서의 논의는 통신서비스에 국한된 것이다.

2. 정부의 정책

개방의 압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대외적인 요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국내적으로도 정보통신을 많이 이용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통신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87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거의 유일한 공식창구였지만 여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내부적인 자유화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89년에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89년 11월에는 동 협의회로부터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0년 7월에는 통신사업자 구조 조정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는 정보통신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경쟁을 도입하고 기본통신에 관하여는 제한적이나마 경쟁을 허용한다는 획기적인 자유화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90년 12월에는 국제 VAN과 데이터의 단순전송을 '91년 상반기부터 허용한다는 후속조치가 정보통신산업육성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국내정책은 통신망의 소유와 전화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개방은 현재 '94년 1월로 되어 있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금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 보면 한국의 통신정책은 그 골격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자유화정

책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일반국민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이 계획상태이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서라고 그 생각되며 앞으로 세부후속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바뀌어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부후속조치에는 많은 정책적, 사업적, 기술적 경험이 필요한데 비하여 국내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신기기의 표준 및 정부조달에 관하여는 서비스의 경우에 비하여 정책 및 규제경험이 많은 편이다. 특히 통신기기중 단말기기 부문은 '80년대 초부터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있었으며 우리기업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업계의 대응자세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경험이 없는 필자의 견해이어서 타당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업계의 어떠한 자세로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았다.

우선 정보통신분야에 관하여는 외국에서의 정보화 발전단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수요가 자기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의 정보화를 추진하며 점차로 상이한 업종 및 일반인들과의 순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일반적인 정보화 발전순서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도 사업인만큼 제3자를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요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정보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우선은 기업들은 자기자신의 정보화에 충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것만이 정보화는 아니며 보다 넓게 공장자동화도 정보화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업계의

최대 현안과제인 경비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서 최우선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선진국의 경험은 또한 자기자신을 넘어선 정보화의 수요기반이 기업에 있다는 점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주문생산을 원하므로 그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업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해야만 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험장은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인만큼 이런 면에서도 자신의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있고 또 경험을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남이 아닌 이상 실제 요구사항의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자연히 비용도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경우 IBM이 어느 항공회사의 컴퓨터예약 시스템(CRS)를 완성하기 위하여 IBM이 최초로 제안했던 기간의 두 배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사례는 사실을 뒷받침하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은 정보통신시장의 대외개방시 외국기업의 한국시장잠식에 한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흔히 염려하는 미국기업에 의한 한국시장지배는 언어 및 문화가 상이하고 기업풍토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물론 우리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통신기기 중에서 단말기기는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일견 모순되는 느낌이 있으나 위에서는 우리의 무선통신시장이 아직은 국내적으로도 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선 단말기기를 제외하고 유선통신기기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무선에 관하여는 서비스나 단

말기기(휴대용전화 및 소형안테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황무지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안보적 이유와 협소한 국토면적을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면으로 보아도 무선 통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앞으로의 통신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기술발전속도가 빠르고 또한 우리가 뒤떨어져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4. 결 언

아무리 여러가지 제안을 하여도 가장 중요한 넓은 사업기반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수요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며 그러한 수요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기업인 여러분이 제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요가 있는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남이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기초하지 않은 기술은 황금을 낳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정보통신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즉 정보통신회선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그것인데 재판매가 허용되면 여유전송능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회선사용 비용의 실질적 저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서도 탄력을 갖게 되어 고객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 다행히도 금년 상반기중으로 비록 부수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회선재판매가 허용이 되므로 정보통신기업들의 적절한 활용이 기대된다.